

## 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아르투르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규준과 준칙설정을 중심으로

### III.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1. 소득주도 성장-포스트케인즈주의의 입장
2.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 IV. ‘소득주도 성장’ 읽기

1. 성서적 시각으로 본 참여, 연대, 그리고 분배
2. ‘소득주도 성장’-기독교 경제윤리로 바라보기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5>

\* 이 논문은 2018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 4월 27일 한남대학교 정선균 선교관 1층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시각에서 바라 본 ‘소득주도 성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 ABSTRACT •

---

Reading Income-led Growth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Choi, Kyung Suk (Assistant Prof. Namseoul University)

In 2019, a topic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ace-based economy. President Moon Jae-in referred to economic issues as a key in his New Year's address in 2019. Human - centered economy and innovative inclusive growth are two central pillars of this government 's economic policy. As a result, income-led growth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The Swiss theologian Arthur Rich studied Christian economic ethics. According to his methodology, it is important to set the criterions and set the maxim. The criterions mentioned in this article are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distribution. When the income-led growth policy passes these three criterions, it can be set as a maxi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Key words:** Income-led Growth, Participation, Solidarity, Distribution, Christian Economic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2018년 화두가 평화였다면, 2019년 화두는 평화를 전제로 한 경제일 것이다.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 경제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두 기둥은 사람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성장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중심기조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시도이며, 사람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을 간략히 기술하자면, 국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가계소득을 증진시킨다. 사회임금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의 비용도 증가한다. 이런 현상은 기업에게 영향을 준다. 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 언론, 보수 정당,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생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그 이론적 배경이 설명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개신교 측의 경제윤리적(이하 기독교 경제윤리라 칭함) 이론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윤리적 틀에서 기준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인 기준들의 설정은 기독교의 보편적 규범인 사랑에서 비롯되어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파생될 수 있는 윤리

적 기준들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아르투르 리히(Arthur Rich)의 경제윤리 방법론에 따라서 ‘참여’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참여적 연대’와 ‘참여적 분배’를 기독교 경제윤리의 기준들로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기준과 준칙설정에 대한 리히의 경제윤리 방법론이 언급될 것이다. 제3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스트케인즈주의의 입장을 통해서 살펴본 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리히의 방법론에 의거해서 경제활동에서 참여, 연대, 그리고 분배가 기독교 윤리적 기준들이 될 수 있는지를 성서적 시각으로 확인한 후 이 기준들의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바라볼 것이다.

## II. 아르투르 리히의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기준과 준칙설정을 중심으로

아르투르 리히의 신학적 입장은 “실존적 종말론”<sup>1)</sup>이다. 인간 사회의 실존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리히의 실존적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성이 도래하는 종말의 입장에서 상대성의 인간 사회의 실존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윤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리히가 제시하는 기독교 경제윤리는 노동을 통해서 사회정의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sup>2)</sup> 리히에 따르면,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적합한지, 즉 인간부합적인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가 결정된다.

1) Rich, A.,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7), 162이하.

2) 이와 같은 해석으로 Meireis, T, *Tätigkeit und Erfürung, Protestantische Ethik im Umbruch der Arbeitsgesellschaft*, (Tübingen: 2008), 182-222.를 참조하라

그는 사회정의에 적합한 경제제도를 준칙(Maxim)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준칙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간부합적인 기준(Kriterium)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인간부합적인 사회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기준들은 철저히 기독교적 실존에서 파생되어 하며 기독교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sup>3)</sup> 기독교의 실존이란 인간의 실존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대표하는 일반적 기준들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 리히는 이런 기준들이 설정되기 전에 기독교의 실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존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sup>4)</sup>을 사회윤리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경험 속에서 특별히 강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의 원칙이 확립된 후, 정의로운 “인간적인 사회질서”<sup>5)</sup>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과 밀접한 인간부합적인 규범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 속에서 “인간부합적인 것의 기준들”<sup>6)</sup>이 설정된다. 리히는 7가지의 인간부합적인 기준들을 제시한다: 피조성의 기준, 비판적 거리의 기준, 상대적 수용의 기준, 상관성의 기준, 이웃됨의 기준, 공동피조성의 기준, 그리고 참여의 기준이다.

리히가 제시한 일곱 가지의 기준들 중에서 핵심 기준들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sup>7)</sup> 첫째 종말론적 시각에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3) Rich, A., 앞의 책, 198.

4) 위의 책, 105.

5) Rich, A., *Sozialethische Kriterien und Maximen humaner Gesellschaftsgestaltung*, hg. von Siegfried Katterle und Arthur Rich, in: *Religiöser Sozialismus und Wirtschaftsordnung*,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0), 11.

6) Rich, A., 앞의 책, 198.

7) 이런 해석으로 Jähnichen, T., *Sozialer Protestantismus und moderne Wirtschaftskultur. Sozialethische Studien zu grundlegenden anthropologischen und institutionellen*

차이를 인정하는 “비판적 거리”의 기준이다. “비판적 거리”의 기준은 기독교적 인간성이 일체의 다른 어떤 기존의 질서들과 같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비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서로를 “상대적 수용”<sup>8)</sup>하는 기준이다. 비판적 자세가 “부정일변도의 사상으로만”<sup>9)</sup>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 불완전한 것, 궁극 이전의 것을 상대적으로 수용”하는 기준이 제정되어 기존의 구조들 내에서 “인간 부합적인 것의 기준들에 더 많이 부합하는 보다 나은 정의”<sup>10)</sup>를 각기 추구하여야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인의 경험지평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가치들이나 덕목들을 인간부합적으로 다루는”<sup>11)</sup> “상관성”의 기준이다. 이 세 가지 형태들의 기준들 이외에, 리히는 실존적 기독교를 고려하면서 인간 부합적으로 전개된 네 가지 관점들을 언급한다. “피조성”의 기준과 “공동 피조성”의 기준은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웃됨”의 기준과 “참여”의 기준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

리히는 사회질서를 사회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 제도를 설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부합적인 것에서 비롯된 기준들과 사회질서에서 비롯된 사실부합적 요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그런 후에 “구체적 결과들, 판단과 결정에서 개선된 방향성들 그리고 실천 가능한 행동제시, 즉 전문용어로 말하면 준칙들을”<sup>12)</sup> 발전시킨다. 준칙들은

---

*Bedingungen ökonomischen Handelns*, (Münster: LIT, 1998), 30이하를 참조하라.

8) 위의 책.

9) Rich, A., 앞의 책, 182.

10) 위의 책, 184. 이런 비교급의 근본특징은 리히와 개신교의 새로운 사회윤리의 전반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비교. Brakelmann, G., *Über den Segen einer komparativen Ethik*, in: K.-W. Dahm (Hg.), *Sozialethische Kristallisationen. Studien zur verantwortlichen Gesellschaft*, (Münster: LIT, 1997), 49-58.

11) 위의 책, 184.

12) Rich, A., *Sozialethische Kriterien und Maximen humaner Gesellschaftsgestaltung*, 앞의 글, 22. 리히는 여기에서 하인츠 에드워드 토티(Heinz Eduard Tödt)의 방법을 인용한다. Tödt, H. E., *Versuch zu einer Theorie ethischer Urteilsfindung*, in: *ZEE 21*, Jg.

사회윤리적 평가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인간성을 신학의 기본방침으로 삼은 후 기준들을 형성하고 준칙까지 설정하면서 인간의 경제행위에서 제도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리히의 경제윤리 방법론이다.<sup>13)</sup>

### III.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 1. 소득주도 성장-포스트케인주의의 입장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성장모델은 노동소득의 하락으로 소득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사회를 통합하는 지속가능의 성장이 둔화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OECD),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동보고서가 경고한다.<sup>14)</sup> 소득주도 성장은 포스트케인즈주의 경제학과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한국적 상황에 맞춘 것이다.<sup>15)</sup> 이들에 의하면, 국가의 총수요를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노동임금의 상승을 통한 소득분배(노동소득분배)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노동소득분배가 상승된

(1977), 81-93. 리히는 퇴트의 방안을 받아드려 쉽게 수정한다. Rich, A., 위의 책, 224.

13) 리히의 입장과 경제윤리의 구체화에 대한 좋은 개요를 위해서는, Wenke, E./vom Brocke, M, *Menschengerechte Ordnung. Erörterungen zu Arthur Richs sozialem Ansatz und Helmut Kaiser,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aus sozialer Sicht*, in: Wenke, E./vom Brocke, M., (Hg.), *Ansätze evangelischer Sozialethik. Ein Arbeitsbuch*, (Bochum: 2005), 101-140 와 141-148.

14) 강병구, “소득주도성장과 조세정책”,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20집 1호, (2018), 90.

15)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4호, (2017), 2.

다면 소비는 촉진되지만 투자나 순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 소득분배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sup>16)</sup> 이와 더불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되면서 가구소득의 불평등도 심해져 내수부족과 저성장을 초래한다. 반면 한국경제는 낙수효과를 노린 이윤주도의 경제로 소수에 부를 집중시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내수부족의 주범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되어야 경기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7)</sup>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위해서 포스트케인주의자들의 성장모형의 언급이 필요하다. 이들은 임금주도 체제(wage-led regime)와 이윤주도 체제(profit-led regime)를 비교하면서 임금주도 모델이 한 국가의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경제에서 노동의 몫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금의 몫을 상승시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총수요는 증가된다. 임금정체 현상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켜 경기를 침체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임금주도 체제이며 그 반대면 이윤주도 체제로 구분된다.<sup>18)</sup>

## 2.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간한 『100대 국정 과제』<sup>19)</sup>에서 16번부터

16) 실제 한국 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면 경제성장의 상승한다. 강병구, 위의 글과 이강국, 위의 글

17) 2013년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실증연구도 한국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강국, 위의 글, 91.

18) 이강국, 위의 글, 3-6.

19)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 과제』, <http://gzzone.kr/gzzone/gZoneSearchDetailList.do?contentsId=PLC20190233677>

22번까지의 과제들이 소득주도성장에 해당된다.<sup>20)</sup> 주요 내용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대통령과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집중으로 관리하여 2022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한다. 이는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하여 지역과 산업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sup>21)</sup>을 고안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sup>22)</sup>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인프라를 확충시키고 2022년까지 이를 위한 일자리 34만개를 설치한다. 특히 공공사회서비스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의 국가적 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시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방문 간호직 공무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서 전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과제로 삼고 있다.<sup>23)</sup>

노동시장에서 소외받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서 청년 구직활동과 신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멀어지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시키고 민간부분은 임금지원 등

20)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그리고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위의 자료, 31-37.

21) 실제 지난 3월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체결되어 실행중이다.

22) 위의 자료, 31.

23) 위의 자료, 32.

을 통해서 촉진시킨다. 아울러 정년일자리를 보장시키고 중장년층의 직업능력향상과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sup>24)</sup>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시켜 국가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을 65세 노인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실직자와 은퇴자의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인프라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적응하고 평생고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sup>25)</sup>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은 필요하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별 융합을 통해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성장 유망 서비스 시장을 지원하고,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시킴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한다.<sup>26)</sup>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업의 가계부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의 과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가계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으로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소비자의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킨다.<sup>27)</sup>

24) 위의 자료, 33.

25) 위의 자료, 34.

26) 위의 자료, 3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국가 금융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분리와 독립을 추진한다. 이로써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융시장의 경제능력과 불균형을 해소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sup>28)</sup>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성장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이를 관리하는 금융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고용동향”조사 자료<sup>29)</sup>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66.2%를 기록하며 2000년부터 조사한 이래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볼 때, 40대를 제외하고도 모든 연령대에도 최대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임금노동자의 분배 현황을 알 수 있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도자료”<sup>30)</sup>와 저소득 가계의 분포도를 알 수 있는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sup>31)</sup>의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계가 40%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줄어들어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27) 위의 자료, 36.

28) 위의 자료, 37.

2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4141](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4141)

3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3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임금의 분배의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소득의 양극화가 비교적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통한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은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수출주도 성장이 누그러지면서 경제의 총성장이 감소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흐름인 측면을 고려할 때 나타는 현상이다.

#### IV. ‘소득주도 성장’ 읽기

##### 1. 성서적 시각으로 본 참여, 연대, 그리고 분배

리히가 제시한 기독교 경제윤리 방법론을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라보려면 나름의 기준들이 필요하다. 이 기준들은 기독교 실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존과 잇대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실존의 근거는 성서이기에, 성서적 시각에서 기준들이 설정되어야 한다.<sup>32)</sup> 성서적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삶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은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sup>33)</sup> 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는 효율적이어야 하며(효율성), 최소의 비용을 지출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경제성).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어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따진다면,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적게 주고, 환경조치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노동자들과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삶을

32) 물론 성서와 오늘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한 오늘날의 노동세계는 성서의 노동세계와 달라 역사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시장경제에 나타나는 참여, 연대, 분배에 대한 관점과 방법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따른 글은 하나의 논문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성서적 증언을 토대로 기준들을 설정하도록 한다.

33) Rich, A., 위의 책, 184.

초래할 것이다.

삶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의 성서적 근거는 기독교의 보편적 규범인 “사랑”에서 출발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상위법인 십계명과 하위법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해석에서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이중계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계명을 말한다. 루터는 활동적 삶(vita activa)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노동이 가지는 의미를 상승시켜 노동을 이웃사랑의 봉사로 이해한다.<sup>34)</sup> 경제활동이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는 것과 경제활동이 이웃을 사랑함에 이바지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활동의 기준들을 성서의 증언 속에서 찾아본다.

### 1) 노동으로의 참여

성서와 기독교 전통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볼 때, 인간의 삶과 이웃사랑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으로의 참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임들 중 하나인 것이다. 노동으로의 참여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구약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책임(창 1: 26)과 경작하고 보호하라는 책임을 부여받는다.(창 2: 15)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명령을 받는다.(창 1: 29) 인간의 타락 이후 부여받은 노동은 인간의 삶을 연명하는 저주이며 동시에 축복이다.(창 3: 17) 인간은 회소성의 조건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들을 구해야 한다.(창 3: 18) 노동의 책임과 형벌을 받은 인간은 여전히 죄인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생육과 번성으로 축약되는 하나님

34) 이와 같은 견해로 Tödt, H. E., *Das Angebot des Lebens, Theologische Orientierung in den Umstellungskrisen der mordernen Welt*, (Güterloh, 1978), 126.

의 축복을 받는다.(창 9: 1)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세상을 변형하거나 형성하는 노동의 책임은 인간의 오용으로 세상을 파괴<sup>35)</sup>할 수도 있다(창 9: 5)는 점은 늘 상기해야 한다.

신약성서의 증언, 특히 사도 바울의 권면은 노동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한 것으로 말한다.(살전 2: 9) 아울러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에 입각해서 열광적 생활을 준칙으로 삼아 노동하는 것을 내팽개친 자들에게 먹지도 말라는 경고를 한다.(살후 3: 10)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노동을 결국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 보고 개인들과 공동체들, 특히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삶을 지속 가능 유지하기 위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행동들 중 하나로 강조한다.(고전 9: 3이하)

노동을 이웃사랑에 이바지한다고 본 성서적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동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은 노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노동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노동하는 이웃을 착취하는 행위인 것이다.<sup>36)</sup>

인간은 노동하는 당위성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노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노동의 위임을 진지하게 인지한다. 인간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그들 고유한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동과 상응하는 것은 그들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35) 성서에서 예를 들자면, 이른바 가인의 자손들이 만든 공동체(창 4: 17이하)와 바벨탑의 계획(창 11: 1이하)과 같이 것이 언급될 수 있다.

36) 이런 해석으로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11-13을 참조하라.

볼 때, 인간의 노동은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이 노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인간의 사회성을 위한 중요한 근본 사실이기 때문이다.<sup>37)</sup>

## 2) 노동함에 있어서 연대성

창조신학에 잇대어 노동함에 있어서 연대성을 살펴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창 1:28) 생육과 번성이란 축복을 받는다(창 1:29). 하나님은 그 전에 생물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준다(창 1:22). 아울러 인간들은 그 땅을 경작하라는 문화명령도 부여받는다(창 2:15).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언급하며(창 2:22)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한다. 그 전에 이미 생물들은 인간을 돕도록 창조된다(창 2:18). 성서의 기록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으며<sup>38)</sup>,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성의 존재인 것이다.

신약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사랑을 강조(막 12:28-34)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고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롬 8:16)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피조물과의 화해(롬 8: 21)를 요청한다. 구약성서의 창조신학과 신약성서 특히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화해신학 속에서 볼 때,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홀로의 능력이나 가능성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이 이웃사랑에 이바지하는 입장에서 노동은 공동체

37) 위의 책, 9.

38) 에밀 부룬너는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Brunner, E.,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gese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Zürich: 1943), 59.

를 지향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며 상호 의존관계를 만들어 낸다. 노동은 근본적으로 협력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보호하라고 받은 위임을 통해서 노동한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서로서로의 동료가 되는 것을 실제로 완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노동은 상호 연대성을 창출한다.<sup>39)</sup>

### 3) 노동을 통한 분배

분배는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sup>40)</sup> 성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집트 노예들의 편에서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통해 나타난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법전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책임이 천명된다. 이집트의 노예 살이를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하며(출 22: 21), 과부나 고아를 보호해야 한다.(출 22: 22) 원시 이스라엘의 계약법전을 새롭게 해석한 신명기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타작이나 수확을 할 때에도 이삭을 남겨야 한다.(신 24: 19) 십일조의 수혜자들은 레위인, 이방인, 고아와 과부들이며(신 14: 28-29), 7년마다 반복되는 면제년(신 15: 12-18)과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법(레 22: 8-55)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들이다. 이자징수를 금지하는 법(신 23: 19-20),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을 제한하고(신 24: 6, 12, 17) 일일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시에 지불하고(신

39) Brakelmann, G., 앞의 책, 10.

4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가 분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가 분배적 정의(iustitia distributiva), 둘째는 교환적 정의(iustitia commutativa), 그리고 마지막은 법적 정의(iustitia legales)로 모두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Frey, C., *Repetitorium der Ethik*,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7), 101.

24: 15) 노예에 대한 보호(신 15: 12)도 철저히 한다. 이런 전승은 예언자들이 수용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곧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 특히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경우(사 58: 6),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경우(사 58: 7) 하나님은 응답한다고 말한다.(사 58: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는 예수의 선언으로 이어진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눈 먼 사람들에게 우선 관심을 가진다.(눅 4: 18-21)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선포한다.(눅 6: 20-21) 최후 심판날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목마름과 굶주림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임을 예수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마 25: 31-46)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사건들은 사회적 약자들인 눈 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적행위들을(마 11: 5)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실현된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대하고 재산과 재물은 공동 사용한다.(행 4: 32-35)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의 미련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 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설명한다.(고전 1: 27-28)

노동이 이웃사랑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노동을 통한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가 힘들기에 노동을 통해 자신들의 후생복리에 열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책임을 가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sup>41)</sup>

## 2. '소득주도 성장'-기독교 경제윤리로 바라보기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존을 고려하면서 성서적 근거로 제시된 세 가지 기준들, 노동으로의 참여, 노동함에 있어서 연대성, 노동을 통한 분배에 부합되는지를 기독교 경제윤리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보험은 아닌 국가의 정책과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용은 OECD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법적 지원은 네 가지 사회보험과는 구별되지만 기업과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보조하는 장치들이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국가는 기업 내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업복지의 혜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자는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정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협상을 하도록 국가는 지원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여기에 속한다. 노동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중 사각지대에 형성된 청소년 노동자, 노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특수한 노

41) 이런 주장으로 EK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Güterloh, 2006), 46-47.

동자들에게도 노동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언급만 없을 뿐 특수 계층에 대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리히가 제시한 기독교 경제윤리에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그 정책을 통해서 인간부합적인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큰 기동은 사람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성장이기때 소득주도 성장은 인간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을 기독교 경제윤리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들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은 청년,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확보와 그들을 위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한다.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임금이 상승되고 노동을 통한 소득의 분배율이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힘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은 첫 번째 기준인 노동으로의 참여의 기준을 통과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관계망과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설치한다. 산업별 융합과 공유경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산업의 개선도 고려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함에 있어서 연대를 강화시켜 두 번째 기준인 노동함에 있어서 연대성의 기준을 통과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의 이윤주도 성장이 아닌 임금의 상승을 목표로 한 임금주도를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향상시켜 노동을 통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케 한다. 이윤주도의 경제정책은 소수에 부를 축적시켜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비해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을 통한 임금의 상승을 정책을 삼아서 마지막 기준인 노동을

통한 분배의 기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기독교 경제윤리에 부합된 하나의 정책으로 판단될 수 있다.

## VI.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으로 제시한 배경을 살피고, 그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이 기독교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운 후, 그에 상응하는 준칙을 설정하는 아르투르 리히의 경제윤리 방법론이 설명되었다. 본 논문은 리히의 방법론을 한국적 상황에 변형시켜 참여, 연대성, 분배라는 기준을 설정했고 소득주도 성장이 기준에 상응함을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수 개신교 세력을 포함한 한국 보수 세력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정책이 한국 개신교에서 적극 지지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은 성서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병구. “소득주도성장과 조세정책”. 『재정정책논집』. 제20집 1호(2018), 89-113.
-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7), 1-48.
-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 Brakelmann, G., *Über den Segen einer komparativen Ethik*, in: Dahm, K.-W., (Hg.), *Sozialethische Kristallisationen. Studien zur verantwortlichen Gesellschaft*. (Münster: LIT, 1997)
- Brunner, E.,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gese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Zürich: 1943)
- EK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Güterloh, 2006)
- Grabenstein, A., *Wachsende Freiheiten oder wachsende Zwänge? Zur kritischen Wahrnehmung der wachsenden Wirtschaft aus theologisch-sozialethischer Sicht*, (Bern/Stuttgart/Wien: 1998)
- Frey, C., *Repetitorium der Ethik*,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7)
- Jähnichen, T., *Sozialer Protestantismus und moderne Wirtschaftskultur. Sozialethische Studien zu grundlegenden anthropologischen und institutionellen Bedingungen ökonomischen Handelns*. (Münster: LIT, 1998)
- Meireis, T., *Tätigkeit und Erfürung, Protestantische Ethik im Umbruch der Arbeitsgesellschaft*. (Tübingen: 2008)
- Rich, A., *Sozialethische Kriterien und Maximen humaner Gesellschaftsgestaltung*, hg. von Siegfried Katterle und Arthur Rich, in: *Religiöser Sozialismus und Wirtschaftsordnung*.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0)
- Rich, A.,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87)
- Rich, A., *Wirtschaftsethik Bd. II,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aus sozialethischer Sicht*. (Güterslor: Güterslorer Verlagshaus, 1990)

Tödt, H. E., *Versuch zu einer Theorie ethischer Urteilsfindung*, in: *ZEE 21. Jg.* (1977)

Tödt, H. E., *Das Angebot des Lebens, Theologische Orientierung in den Umstellungskrisen der modernen Welt.* (Güterloh, 1978)

Wenke, E./vom Brocke, M, *Menschengerechte Ordnung. Erörterungen zu Arthur Richs sozialem Ansatz und Helmut Kaiser,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aus sozialem Sicht*, in: Wenke, E./vom Brocke, M., (Hg.), *Ansätze evangelischer Sozialethik. Ein Arbeitsbuch.* (Bochum: 2005)

• 인터넷 자료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 과제』, <http://gzone.kr/gzone/gZoneSearchDetailList.do?contentsId=PLC20190233677>

• 통계청 자료

“고용-동향” 조사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4141](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4141)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435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9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2일

---

• 국 문 초 록 •

---

우리나라의 2019년 화두는 평화를 전제로 한 경제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부분에 주요한 내용을 할애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두 개의 중심 기둥이다. 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소득주도와 사람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이 기독교 윤리, 특히 기독교 경제윤리적 시각에서 하나의 준칙임을 리히의 경제윤리 방법론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리히가 제시한 기준 설정의 방법론에 의거해서 참여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참여적 연대와 참여적 분배를 기독교 경제윤리의 기준들로 설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위의 세 가지 기준들을 통과한다면, 기독교 경제윤리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독교 경제윤리의 시각에서 오늘날 한국 경제 상황에 필요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은 성서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소득주도 성장, 참여, 연대, 분배, 기독교 경제윤리

---